

2013. 11. 28. (목) 오전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민생경제팀 강길성 팀장 (02-731-2420), 정순길 사무관 (2423)
거시금융팀 임상준 팀장 (02-731-2440), 최상아 사무관 (2441)

의료·교육·관광서비스 동아시아 허브 전략 제시

-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회의 개최 -

- ◆ 우리의 강점을 살려 과감한 규제완화로 의료, 교육, 관광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아시아 허브화를 추진하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
- ◆ 복지지출의 누수를 막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, 고용-복지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, 공통브랜드화 추진(가칭: 국민행복센터) 등 서비스 전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
- ◆ 홍릉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KDI에서 자문회의를 개최

- 11.28일(목), 오전 10시부터 KDI에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,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되었음
- 금번회의는 연말로 예정된 세종시 이전을 앞둔 KDI에서 열림으로써 국가 경제정책의 쉼크탱크로서 40여 년 동안 활동해온 KDI의 홍릉 시대를 의미 있게 갈무리하는 한편,
 - 그간 KDI가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해 축적한 정책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문위원들과 협업하여 준비한 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」을 보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음
 - 아울러, 오늘 회의에선 민생경제분과에서 노동연구원, 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마련한 「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」에 대한 보고와 토론도 함께 이루어졌음

□ 먼저, KDI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상당부분 기인*한다고 분석

*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가 90년대 수준을 유지하였다면 경제성장이 0.6%p 추가 상승 가능(KDI 추정)

- 서비스산업의 발전미흡은 이념적 대립 등으로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며, 향후에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손익 분석을 토대로 정책추진 여부, 확대 등을 결정할 것을 제안

* OTC 의약품 설문조사('13.11): 구매자중 부작용 경험자는 2.8%에 그쳤으며, 대부분(85.7%)은 가벼운 증상. 미구입 사유는 63.4%가 필요약품이 미포함

-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대한 현장분석 등을 토대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, 교육 등의 동아시아 허브전략을 제시

-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규제 완화*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이 경자구역에 진출할 유인** 제공

* 경자구역 외국병원 설립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, 외투비율 50% 인하

** 경자구역내 국내병원에 외국인 환자규제(총병상수 5% 이내) 폐지와 외국인 의료진 채용 허용 등

- 또한, 국내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진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(자금조달과 과실송금 허용)

-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잉여금의 배당·송금을 허용하고,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

-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의 신용등급 관련규정을 개선*하고, 현행 민원신청방식을 공고방식으로 전환

* (현행) 신용등급 BBB 이상만 가능 → (개선) 신용등급 이외에 자금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- 또한 자문회의는 맞춤형 고용복지전략의 핵심인 사회서비스*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전달체계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·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

* 복지, 고용, 보건의료, 교육, 주거, 문화, 환경 등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

- 부처별로 관리중인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확대, 실시간 연동 강화, 신규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근거도 조속히 마련
- 궁극적으로 고용·복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통합형 「고용-복지센터」 설치를 지향하되 초기에는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연계를 강화*하도록 운영

* (현행) 고용(고용센터 등)과 복지(지자체)가 분리 → (개선) 고용센터·지자체간 전문가 상호파견으로 원스톱서비스 구현, 또는 공간통합형 고용-복지센터 설치

- 고용센터, 공공 복지서비스 기관 등을 “(가칭) 국민행복센터”로 공통 브랜드化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앱 개발
- 사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상시 평가·퇴출체계를 확립하고 판로확대, 출자금지원 등 창조적 공급자* 진입 유인을 제공

* 예)공동주거를 활용한 자립형 복지공동체, 틈새시장인 ‘시간제 돌봄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, 농업·R&D·문화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설립한 협동조합 등

- 전담 사무국(현재 복지부 2개과) 및 사회서비스기관 평가전담조직 설치, 예산당국과의 협력 등을 통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·조정기능 강화*

* 주요사안은 대통령 주재(현재 총리주재), 주요 복지사업군 심층분석 평가 실시 (기재부 협력, 예산에 반영), 복지사업을 포괄보조금방식으로 단계적 전환검토 등

- 일반행정 인력의 전환배치, 유사기관인력 통합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담당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

<첨부>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안건 주요내용

안건 1

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 제언

1

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그간의 정책 평가

- KDI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주로 기인하며, 서비스산업 성장 기여도가 '90년대 수준을 유지하였다면 GDP 성장률이 0.6%p 추가 상승 가능한 것으로 예측

* 서비스 산업 성장기여율: ('71~'80) 34.7% → ('81~'88) 35.2% → ('89~'98) 47.8% → ('99~'12) 40.9%

- 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크고,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의료, 교육, 관광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

* 매출액 10억원 당 고용규모 : 서울대병원 7.7명 / 삼성전자 0.6명, 현대차 0.7명

** (1980~2010) 세계 상품교역 증가율 6.6%, 서비스교역 증가율 7.9%

- 그간의 서비스산업 정책은 이념적 대립과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*로 정책 추진이 지연됨

* 예)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및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 논란

- 또한 외형상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시행령 또는 다른 법규에 의해 승인이 불투명해 적극적인 투자 결정이 어려움

* 현장면담 결과, 법률상 허용되어 있어도 정부 승인이 불확실하여 투자결정에 애로

- 정책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 등 현장에서 정책집행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임

- 서비스산업 시범구역인 인천과 제주도의 경우, 의료, 교육, 관광 등 일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외국(싱가폴)과 비교시 여전히 규제 수준이 높아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

-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주요 이슈 가운데 합의 가능한 과제를 우선 선택하고 이후 정책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
 - 이해관계자간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발굴하여 상호 win-win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,
 - 이를 시범지역 등에 우선 시행한 후 객관적인 손익계산 분석에 근거하여 연관 정책 및 지역으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
 - * OTC의약품 설문조사('13.11): 구매자중 부작용 경험자는 2.8%에 그쳤으며, 대부분 (85.7%)은 가벼운 증상. 미구입 사유는 63.4%가 필요약품이 미포함
 -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OTC 허용품목과 판매장소 확대 검토 필요
 - 또한, 제로섬 경쟁에 갇힌 내수시장을 탈피하여 의료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 수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

- ① 우선, 경자구역으로 국내·외 병원이 진출 유인을 갖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등 동아시아 의료허브화를 추진
 -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요건*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, 국내 병원의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규제(총 병상수 5% 이내) 폐지 및 외국인 의료진 채용 허용

* 외국의사 10% 이상 고용, 병원장은 외국의사 등(제주도는 외국의사 규제 없음)

- 외국 의료진의 국내 연수 지원을 확대하여 중증 치료는 한국으로 연계하도록 유도하고, 글로벌 보험사들과 한국 의료기관 이용 제고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

* 미국보험의 커버리지에 포함되지 않는 중증치료 등을 포함

② 둘째,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의료기술 분야를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

- 해외진출 법인 설립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*을 제정하고, 효과적인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추진단 구성 및 정부간 교섭을 강화

* 가이드라인은 해외병원 건설시 자금조달과 현지수익의 국내송금 관련규정 포함 필요

③ 셋째, 해외 우수대학 및 외국학생 유치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

- 일정한 요건* 하에 외국 학교법인의 잉여금 배당·송금이 가능하도록 하고, 국내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대학과의 합작법인 설립 허용을 검토

* 시설물 재투자, 학교발전기금 적립 후 잔여분에 대해 허용하고,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도 병행

- 동아시아국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재원으로 ODA 지원을 활용하고, 국내학생들에게 경자구역 및 제주도 내 외국교육 기관에서의 Summer School 허용 방안을 검토

④ 마지막으로, 카지노와 MICE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적극 개발

-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신용등급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외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, 공고방식의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

* (현행) 신용등급 BBB 이상만 가능 → (개선) 신용등급 이외에 자금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및 현황

□ 사회서비스*는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고용복지전략의 핵심임

* 복지, 고용, 보건의료, 교육, 주거, 문화, 환경 등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

- 현금급여 중심의 소극적 소득보장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의 적극적 생활보장으로 전환되는 한국형 고용복지전략의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% 달성, 중산층 복원 등에도 기여

⇒ 사회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융합형 전달체계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

□ 그러나 현재의 복지전달체계는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프로그램 난립, 전달체계의 분절, 질 낮은 민간서비스 등의 문제가 지속

- 그간의 전달체계 개편 노력은 일회적, 공급자중심, 분절적 대책으로서의 한계를 노정 ⇒ 상시적, 수요자중심, 통합적 전달체계 개편 노력이 필요

< 최근의 전달체계 개편 노력과 한계 >

	프로그램 통합조정	전달체계 개선	질 낮은 공급자 퇴출
그간의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지사업통합조정('09-'11) •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('10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일(My Job) 드림 프로젝트('13) • 근로빈곤층 우선지원 시범사업('13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요양병원 의무인증제('12) •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('13)
한계 및 문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회성 성격 • 사회정책 사업 전반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통합조정 부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부, 복지부외 타 부처 참여 미흡 • 서비스 초기장구(Gateway)를 넘어선 고용-복지 원스톱서비스 논의 부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중적 사후대처 위주 • 좋은 공급자 활성화 대책 미흡

◇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통합 서비스공급의 상시적 관리 필요

- 이를 위해, ① 정보시스템 연계·활용 강화, ②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, ③ 공통 브랜드화, ④ 창조적 공급자 활성화, ⑤ 거버넌스 강화, ⑥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

1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통합관리

- (현황)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(10년) 이후 복지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, 고용 및 조세 분야와의 정보연계나 활용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
- (개선방안) 부처별로 관리중인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확대하고,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시스템 실시간 연동 강화로 활용도를 증진할 필요

*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

2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

- (현황) 고용은 고용센터, 복지는 지자체로 전달체계가 나뉘져 있으며, 여타 부처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고용 및 복지센터를 각각 운영 중임
- (개선방안) 고용과 복지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공간통합형 「고용-복지센터*」 설치를 지향하되, 초기에는 지자체 상황에 맞춰 상호 인력파견 등을 통해 연계를 강화**해 나가도록 운영

* 공간통합형 「고용-복지센터」 유사사례(남양주시) : 복지상담, 창업지원, 미소금융, 보건·의료·고용 등의 서비스를 '희망케어센터'로 통합

** (현행) 고용(고용센터 등)과 복지(지자체)가 분리 → (개선) 고용센터·지자체간 전문가 상호파견으로 원스톱서비스 구현, 또는 공간통합형 고용-복지센터 설치

③ 고용·복지 서비스기관의 공통 브랜드화

- (현황) 고용·복지 관련 서비스기관이 각기 다른 명칭과 상징을 사용하고, 부처별·기관별로 별도 웹사이트와 콜센터를 운영
- (개선방안) 관련 기관을 '국민행복센터(가칭)'로 공통브랜드화 하고, 융합사회서비스에 대한 통합 웹사이트 및 앱 개발

④ 창조적 사회서비스 공급자 활성화

- (현황) 창조적 서비스기관 창출을 위한 제도기반이 미흡하고, 질 낮은 공급자에 의한 재정누수 및 서비스 질 하락 등 문제 발생
- (개선방안) 상시적 평가-퇴출체계를 확립하고, 창조적 공급자* 진입에 대한 유인**을 제공할 필요

* 공동주거를 활용한 자립형 복지공동체, 틈새시장인 '시간제 돌봄'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, 농업·R&D·문화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설립한 협동조합 등

** 예) 융합적 협동조합 출자금 지원·세제혜택, 홈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등

⑤ 사회서비스 정책의 거버넌스 강화

- (현황)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정책 심의·조정기능을 위한 전문인력, 예산과의 연계 등 지원체계가 미흡함
- (개선방안)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하에 회의를 개최해 '한국형 복지정책'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표명하고, 전담사무국을 설치하여 예산당국과 협력해 프로그램 등을 상시 조정*할 필요

* 주요 복지사업군 심층분석 평가실시(기재부 협력, 예산에 반영), 복지사업을 포괄보조금방식으로 단계적 전환검토, 사회서비스기관 평가전담조직 설치 등

⑥ 사회서비스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

- (현황) 고용·복지수요 대비 절대인력이 부족하고, 공무원 순환 배치·단기계약 위주의 민간인력 운영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
- (개선방안) 일반행정 인력의 전환배치를 확대하고, 유사기관 인력 통합, 전문인력 부족분 충원 등을 통해 인력 확대 추진

※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하는 안건 참조